

신년좌담회_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목차

목차	2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과 주민의 대응 모색	4
긴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다른 나라의 경험과 시사점	20
토론1	28
토론2	30
토론3	32
토론4	36

프로그램

- 10:00 사회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 10:05 발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과 주민의 대응 모색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30 발표 긴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경험과 시사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11:55 지정토론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11:40 종합토론
- 12:00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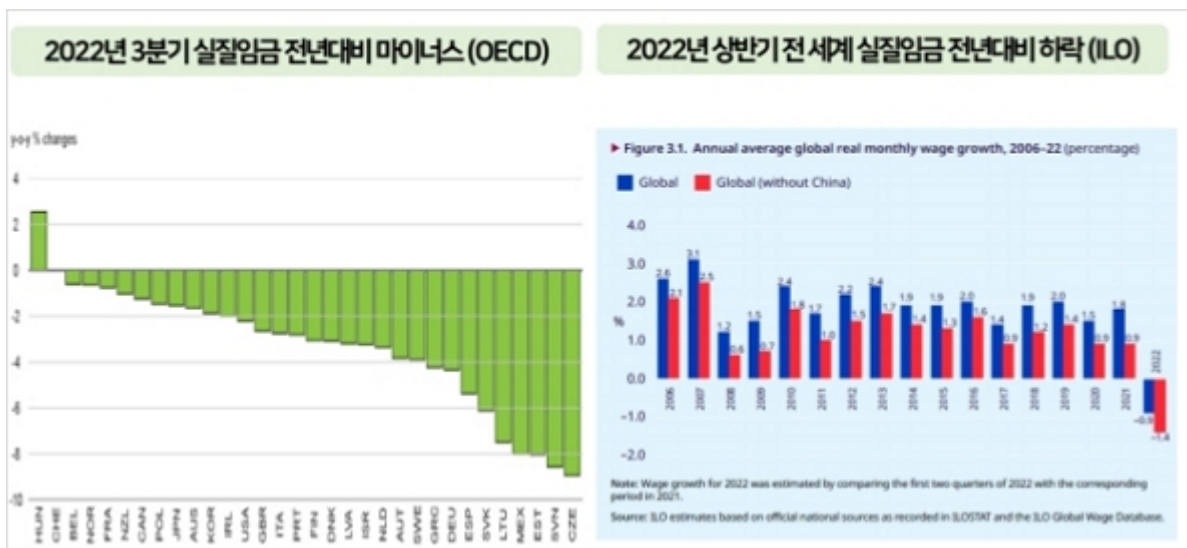
발제1_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과 주민의 대응 모색

김진석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한국사회 현황

- 우선 세계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위축되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각 나라들은 재정과 총수요 확장 기조를 유지해온 결과임.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미-중 갈등 등의 정치외교적 환경으로 인해 무역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임.
-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상황인데 반해 명목임금이 동반하여 인상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으며<그림1>,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질 위험이 큼.



<그림 1> 2022년 실질임금 현황

출처: 이강국(2023). 악화되는 세계경제, 각국의 대응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2023/01/11. 신년 좌담회 자료집.

-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국가의 귀환, 큰 정부의 귀환을 시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세계경제와 경제정책의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로의 복귀가 두드러짐.
-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이어지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해외에서 시작된 복합 위기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이와 같은 성장세는 최근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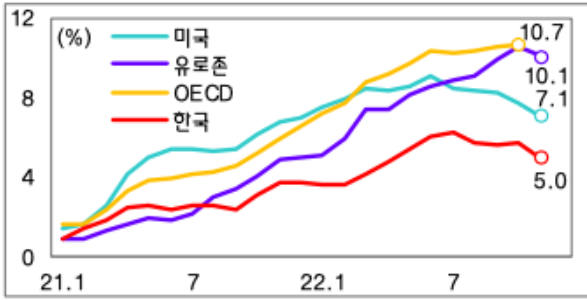


<그림 2> 경제 성장률 현황과 전망

출처: 2022/12/15. 윤석열 정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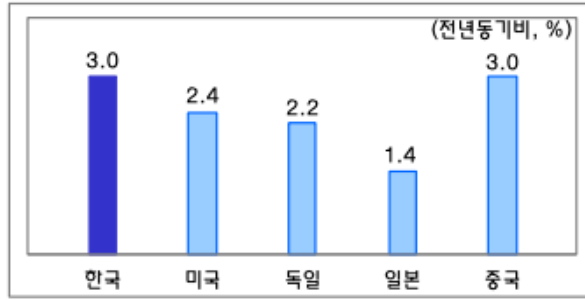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국 대비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성장률 전망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



* 출처 : 각국 통계청

주요국 성장률 비교('22.1/4~3/4 기준)



* 출처 : 블룸버그

<그림 3> 주요국 물가 상승률 및 성장률 현황

출처: 2022/12/21. 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최근의 급락, 가계 부채의 급증에 이은 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 확대 우려가 있음.



<그림 4>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와 가계부채 현황

출처: 2022/12/15. 윤석열 정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료.

- 이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소멸되지 않은 팬데믹의 위기,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으로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미중간 패권 싸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양한 차원에서 재편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 블록화 등 정치-군사-외교적인 측면의 불안요소도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이에 따른 일본의 호전적 군비 증강 흐름 등 북한이라는 위험요소가 우리 사회에 상수로 작용하고 있음.

2.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현황: 긴축과 민영화

-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은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아우르는 기초가 정형화되지 않고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키워드를 정리한다면 크게 긴축과 민영화로 정의될 수 있음.
-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의 분야는 이와 같은 긴축과 민영화의 기초가 집약되어 드러나는 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영역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시장화, 영리화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 전반에 걸쳐 공공연하게 공공책임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음.
- 집권 후 반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와 같은 정부 브랜드나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초를 반영한 ‘혁신적 포용국가’ (문재인)와 같은 정형화된 ‘00국가’의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경향은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서 드러난 한계점, 즉 사회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상이나 주민 삶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 사회정책 관련 현황과 정책적 제한점에 대한 진단과 문제 인식이 부재한 문제가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식화된 문서나 정형화된 발표가 없는 관계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은 가용한 자료나 기점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추정하기 위해 6월 16일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5월의 최초 발표 이후 보완을 거쳐 7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7월 7일의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8월 10일에 발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 12월 21일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들 자료 가운데 120대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을 포함하여 국정운영계획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문서로 공유된 바 있어 가장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120대 국정과제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외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료 (6/16 정부 발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료 (7/7 정부 발표), 2023년 예산안 (8/30일 정부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 (12/21 정부 발표)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음.

1) 120개 국정과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						
6대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4. 경제계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9.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 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으로 기억하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20대 국정과제	15개	26개	32개	19개	18개	10개

<그림 5>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출처: 윤석열 정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료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였음.
-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원칙은 아래에 살펴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 윤석열 인수위가 제출한 국정과제의 구조를 보면 6개 국정분야에 걸쳐 23개의 약속을 제시하고 다시 그 하위에 12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는 문재인 정부의 5개 영역,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분야	약속	국정과제	주관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복지부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46.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48.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법무 농식품부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약속11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약속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 등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 복지부 등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 없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 없음		

- 전체 120개의 국정과제 가운데 총 17개 과제가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되어있음(위 표 참조) 6개 국정분야 가운데 3번째 분야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11개의 사회보장 관련 약속과 국정과제가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복지 관련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과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영역에 ‘약속01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위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어있음.
- 국가경쟁력 회복과 선진국 도약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도약의 과정에서 정체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 약화’를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평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소득주도 성장모형과 포용적 복지국가 모형의 시도에 대한 나름의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원인진단과 함께 국민의 요구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결국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것을 국정운영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고 천명함.
-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와 원인 진단,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보수정부의 ‘더 큰 대한민국’과 과거 진보정부의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향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소외 등 ‘삶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정책을 동원하는 잔여적 접근을 취하게 될 것이 우려됨; 이와 같은 두 개의 전략 가운데 특히 ‘더 큰 대한민국’의 지향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천명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 중심으로 중심축을 수정한 것을 다시 과거의 방향으로 수정 내지 회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더 따뜻한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직전 정부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방향성의 측면에서 맞닿아 있으나, 지난 정부가 국가의 책임성 강조와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접근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의 책임보다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다변화와 규모화, 민관협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을 강조하는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으로의 회귀를 천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효율의 강조와 민관협업 등 민간 기제의 역할 강화에 대한 강조는 국정과제 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 방향,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2023년 예산안**,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 등의 자료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민영화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하고 있는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과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점을 과제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과제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분야에 포함된 국정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복지부의 주요 업무인 보건의료조차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어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산업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다음으로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의 과제는 기재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함의하는 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신기술,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 및 입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보수 정부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진하고자 했던 법안임.
- 이 법안은 사실상 보건의료,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 공공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서비스산업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직면한 바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부처간 자율권 문제, 그 적용대상을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라는 법률적 원칙도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 (헌법 제**75**조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음.¹
- 공공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의 우회적 민영화의 흐름은 새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에서도 포착되는데, 국정과제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에 포함된 연금개혁 추진 방안은 그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음.

¹ 제갈현숙. (2021). “총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참여연대 등 주최 토론회 발제문.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과 기초연금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사회적 합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접근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와 대통령실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목소리는 연금재정의 건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우선순위로 두고 국민연금에 대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치고 있음.²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통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무산되거나 후퇴하는 경우 사실상 공적연금의 역할과 기능이 부차화되면서, 특히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 사적연금 등 민간 영역에서 사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계획을 찾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금이라는 소득보장의 영역 또한 공공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은밀한 민영화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것임.

2)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기타 자료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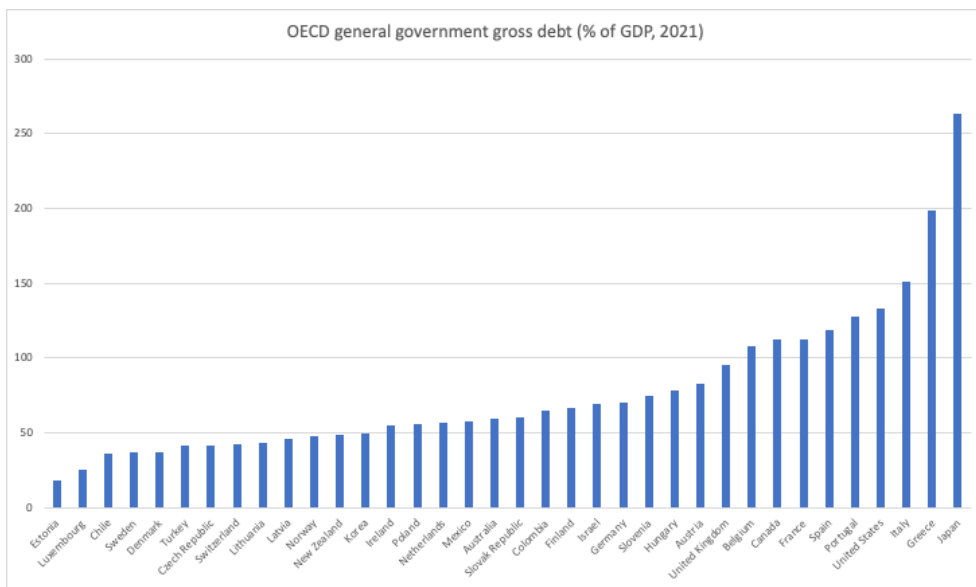
- 지난 7월 6일 새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였음; 짧게는 내년 예산안 구성, 길게는 윤석열 정부의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현 정부의 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라 할 수 있음.
-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목표로 '민간주도의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하였음.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언급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문제 삼은 점이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며, 실제로 2023년 예산안은 2023년 예산의 의미와 기조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³
- 하지만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이로 인한 위기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국면에서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돌봄의 위기, 생계의 위기, 주거의 위기, 고용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기조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임.

² “대통령실 “국민연금 모수개혁 곧 추진... 공론화 촉진할 것”, 연합뉴스포맥스, 2022.08.0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7037>

³ 그러나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안을 지난 정부의 슈퍼예산과 비교되는 긴축예산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https://firenzedt.com/24420> ‘2023년 예산안’의 거짓과 진실 참조.

- 2023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 638.7조 원은 지난 수년간 본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직전 정부 기간 동안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인 5.2%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예산임.
- 복지부 예산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11.8% 증가로 지난 정부의 평균 증가율 11.0%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앞서 언급한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하면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긴축재정 전환의 근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정재정의 원칙에 과잉규정되어 주요 비교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해온 사실을 반영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또한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국가부채가 늘었다고는 하나 2021년 현재 국가부채율도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고려해야 함<그림 6>.



<그림 6> OECD 국가 부채율 현황

출처: OECD statistics

- 새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재정혁신의 내용으로는 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보조사업 준비를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움. 지자체 사업과 유사, 중복이거나 코로나 한시사업 등 11개의 일자리사업을 폐지하는 등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저성장 시대에 재정지원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접근임.
- 정부는 대안으로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시장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상 집단 등의 측면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책없이 일자리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다름 아님.
-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7월 6일 회의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재정운영 전략을 별도로 밝힌 바 있음. '복지투자 혁신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1. 복지투자 혁신, 2. 성장 친화적 복지 전략, 3.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4. 새로운 복지수요 적극대응, 5. 지출구조 개혁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제안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상적인 수준에서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민간 기관 참여를 강조하고, 생활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주민의 삶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도 전반에 걸쳐 공공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은 부재한 것으로 보임.
- 성장 친화적 복지전략의 경우 양육환경 개선과 저출산 투자를 강화하고 청년 및 근로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장 친화적 복지전략, 저출산 투자 등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내용들이 성장 친화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불명확함.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경우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복지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움. 돌봄 등 주민의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할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급여수준과 접근성이 축소되고,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과정에서조차 사회적 낙인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우려가 있음.
- 복지분야 지출구조 개혁을 위해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다 온갖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통폐합 시도를 재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또한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개혁의 경우 주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한 주민의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삶을 지키는 근간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대한 고려 없이 재정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개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경우 건전한 재정을 위해 주민 삶의 안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연금 개혁에 대해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확인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제로 노동, 교육, 연금을 들고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라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⁴.



<그림 7> 2023년 경제정책방향

출처: 2022. 12. 21. 관계부처 합동

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0044>

- 또한 <그림 7>에 보인 바와 같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관련하여 '약자복지 확충'이라는 워딩이 유일하게 등장하며 선별적 복지의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위한 3대 구조개혁의 과제 안에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제에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 또한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위한 3대 경제혁신 과제안에는 앞서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과 자율 및 책임경영 강화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법인세 전구간 1% 인하, 보유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해 감세 위주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 수준은 정부가 발표한 5년간 13조 원을 훨씬 웃도는 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⁵.
- 이와 같은 대규모 감세는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건전성의 기조와도 모순되는 접근임.

3.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 평가

- 이상의 현황 고찰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해 평가해본다면 첫째, 민영화의 흐름과 같이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둘째, 전반적인 긴축 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두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선별적 접근의 강조, 셋째,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통합적 인식의 부재로 정리할 수 있음; 여기서는 이 발제문이 주제에 맞추어 민영화와 긴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1) 민영화: 공공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혹은 부정

- 사회보장 관련 정책 전 영역에 걸쳐 주민의 권리로서의 사회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 특히 사회적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보육, 요양, 활동보조 등

⁵ 이상민. (2022).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규모. 나라살림연구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의 욕구에 대해 국가 보장의 약속이 부재함.

- 반면, 사회서비스 혁신의 과제가 강조되고, 이러한 구호 아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등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는 제공기관의 다변화를 명분으로 기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의 방향을 되돌리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임.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약속하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 사회서비스 직접제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부차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자체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임.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은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책임성 강화라는 지난 정부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의 기획과 제공을 위한 민간과 시장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2) 긴축: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성하는 20개 국민과의 약속 가운데 ‘약속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는 사회보장 영역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약속임.
- 이 약속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접근법을 집약해 놓은 것인데,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선별적 접근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접근은 예를 들어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성(소득대체율) 강화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개혁안 마련보다는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즉 기존 공약에서 드러난 인식과 접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대신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즉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함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음.
- 이와 같은 접근은 세대내 연대와 세대간 연대를 통해 작동하는 복지국가 운영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접근과 인식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접근아래 제시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의 과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급여 수준 상향조정, 재산기준 완화,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강화 등 긍정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실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러나 기존 공약에서 제시한 바 있는 기초생보 수급자 급여 결정시 근로 및 사업소득 50% 공제의 약속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추후 확인이 필요함.
-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사실상 보편적 사회보장과 이를 위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존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사실상 선별적 접근에 다름 아님.

4. 대응방안

- 긴축과 민영화라는 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민생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음.
- 불평등 심화가 경제 성장에도 위해 요소라는 합의 하에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는 시민들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하고,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과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의 귀환을 도모해야 함.
-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정성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귀환에 필수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중상위 소득계층과 자산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 강조.
- 상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긴축의 흐름과 달리 민영화의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위장된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연금, 공공기관 운영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의 흐름에 대해 알리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노력 필요함.
- 한국사회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취약한 민생문제 대응을 위한 복지국가의 대응으로 '약자복지' 등의 개념으로 감추어진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과 부적절함을 강조해야 함.

- '혁신', '민간 역할 강화', '서비스 산업 발전', '효율화' 등의 수사에 감추어진 시장화와 민영화, 공공 책임성 부정의 문제,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감추어진 긴축과 민생 외면의 문제를 폭로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정책, 장기적인 저성장 내지 탈성장의 경향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의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발제2

긴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경험과 시사점

우석균_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긴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른 나라의 경험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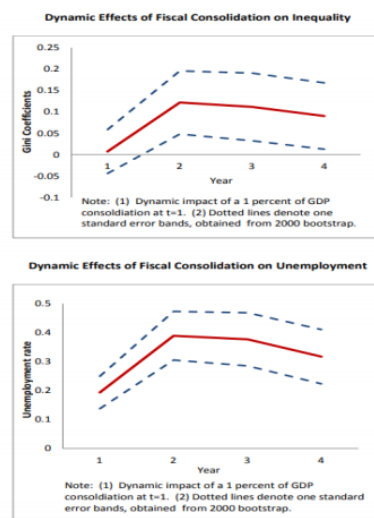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2022. 01. 18.

1

경제위기와 긴축, 불평등

- 2007~2009년 세계적 대불황에 따른 공적부채와 이에 따른 재정지속성에 대한 우려 증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일으킴
-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결합하여 재정 조정
- IMF 보고서는 재정 건전화의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 특히 재정지출삭감이 조세정책을 통한 재정건전화보다 더 큰 불평등 초래
- 적극적인 누진적 조세정책이 지출삭감보다 불평등을 덜 초래함

Figure 4. Dynamic Effects of Fiscal Consolidation on Income Inequality and Unemployment



Sources: Authors' estimates.

IMF working paper :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Fiscal Consolidation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What Do the Data Say?" 2013

2008년 경기침체와 긴축정책이 건강에 미친 영향 - 유럽의 건강 및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

- 유럽은행, EC, IMF(이른바 트로이카)의 재정건전화 정책
: 유럽정부의 80%가 재정건전화로 대응. 대부분 예산삭감(=긴축정책)
- 긴축이 건강에 미친 영향평가는 공식적으로는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음
- 긴축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1) 사회적 위험 효과(Social Risk Effect 간접적 영향)
 - 2) 직접적 건강 효과(Direct Health Effect 직접적 영향)

3

사회적 위험 효과

1) 실업

- 영국의 경우 긴축정책의 결과 50만명 실직. 실직이 많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20%까지 증가. 반면 런던의 경우 실업 감소-> 자살률 감소
- 그리스 긴축정책 2009~2011년 자살률 2배 증가
- 영국 긴축으로 인한 실업수당 자격 강화 -> 굶주림과 우울증 증가, 먹거리불안정, 노숙 증가

2) 노숙과 주거불안정

- FEANTSA 자료. 유럽 노숙자 지원조직의 60%가 예산삭감 경험
- 무주택은 감염병, 신체손상, 먹거리불안정, 다중질병, 조기사망의 위험을 증대시킴
- 유럽 30개국 조사결과 자녀가 있는 가정의 퇴거 및 압류 취약성 증가

4

3) 먹거리불안정

- 자선단체들, 긴축정책이후 긴급식량지원 인구가 급격히 증가 보고
- 유럽 식이조사 : 이틀마다 고기(및 대체 야채) 공급불가능 가정이 2009년 8.7%에서 2012년 10.9%로 증가 (약 1,350만 명).

4) 정신 건강

- 미국 포함 13개국 다국조사결과 50~64세 실직->우울증상 초래 가 큼. 이 연령대 실직이 미국 28%, 유럽 8%증가
- 그리스 1달 우울증 유병률 증가 2008년 3.3%, 2011년 8.2%, 2013년 12.3% 로 증가
- 유럽 2007년 이전 자살률꾸준히 감소했으나 2009년 6.5% 포인트 증가
- 많은 나라들이 경제불황 회복 이후에도 자살률 감소하지 않음, 이는 실업률, 채무, 주기불안정 문제와 연관.
- 긴축은 경제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를 장기화 및 더욱 악화

5) 연금생활자들과 노령사망

- 일부 유럽 국가 노령 사망률 증가. 2015년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높은 증가.
- 영국의 80대 이상 사망률 증가는 경제 불황보다 재정삭감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5

직접적 건강영향

1) 재정과 효율성

- 재정 압박에 대응하여 많은 정치 지도자들 공중 보건 기금 삭감
- 유럽 국가중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및 포르투갈에서 긴축이 특별히 심각했음.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적인 조치일지라도, 의료 시스템 보호 또는 예산 삭감 범위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이러한 국가들이 건강영향이 가장 적음
- 가장 큰 긴축의 영향은 병원 부문, 행정 비용, 의약품 가격, 직원 수와 임금에 미침. 이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장기적 영향은 이후 코로나 대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음. 이본 코로나 유행시기 긴축정책이 심각했던 남부 유럽이 코로나에 가장 큰 피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PIG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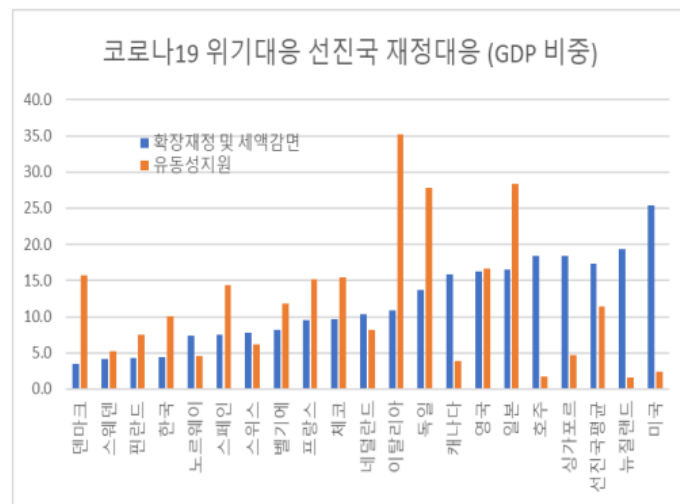
2) 진료에 대한 보장 및 접근성

- 경제위기 기간 동안 여러 형태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어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 높임.
- 50세 이상의 코호트를 추적하는 유럽의 건강, 노화 및 은퇴 조사(SHARE)에 따르면 위기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본인 부담 지출이 증가했으며 치명적인 의료 지출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
- 긴축은 경제 위기보다 더 크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침.
- 유럽의 '자기보고 미충족 의료수요' 하향 추세가 긴축정책이후 전반적으로 역전. 미충족 수요는 2005~2009년 2% 포인트 감소했으나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증가, 2012년에는 3.4% 기록. (150만 명).
- 미충족 의료수요 증가는 그리스, 라트비아, 포르투갈 등 본인 부담금 비율 높은 국가에서 두드러짐.
이 국가들에 대한 EU-SILC 조사 데이터. 긴축정책 최고조사 미충족 의료수요 4~6% 포인트 증가
- 긴축은 서비스접근성 사회 경제적 격차 확대. 2008~2013년 그리스 미충족 수요는 점진적 증가했으나 불평등 격차는 극적으로 벌어짐. 가장 가난한 소득 5분위 미충족 수요 7%에서 14%로 두 배로 증가, (가장 부유한 소득 5분위에서는 1% 미만 비율 유지).
- 미충족 수요 불평등 실적으로 더욱 확대.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기간 실직은 부유한 가정 미충족 수요 4% 증가 반면 가난한 가정 6% 증가

7

코로나 19 위기 대응 선진경제국들의 재정대응 (2021.6 까지)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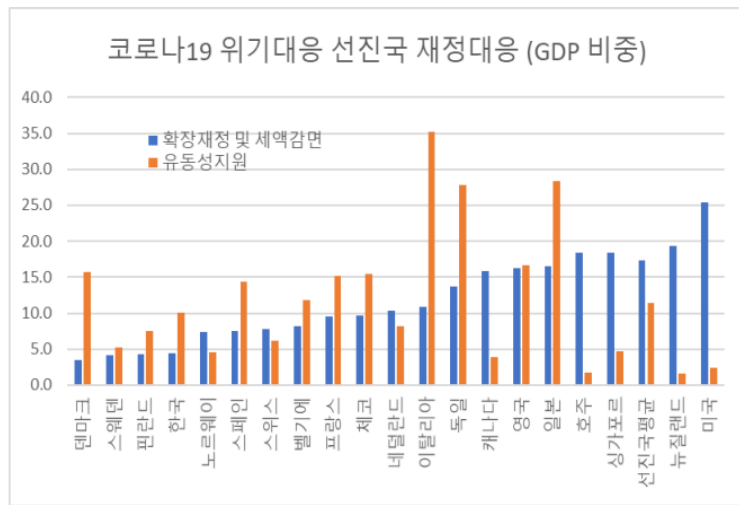
- 2021년 7월까지 코로나 대응 지출을 살펴보면 선진국 20개국 평균 17.3%를 지출했으나 한국은 4.5%만을 지출함(IMF data)
- 코로나 대응 지출이 적었던 나라들은 원래 사회보장 수준이 높았던 나라들도 포함
- 특히 한국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함께 2021년 말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엄격한 방역정책을 시행함.
- 그러나 다른 제로코로나 나라들은 모두 코로나 대응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들임



8

코로나 19 위기 대응 선진경제국들의 재정대응 (2021.6 까지)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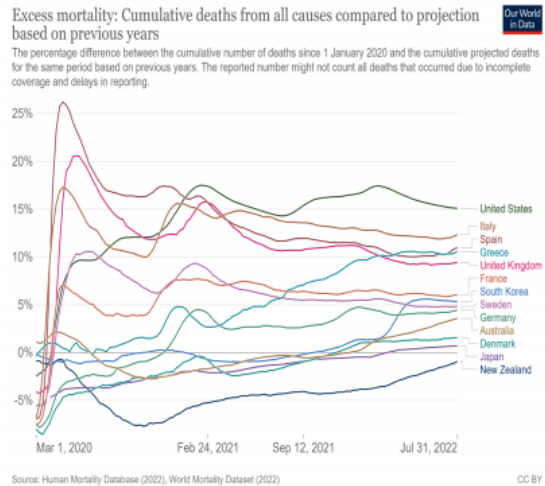
국명	확장재정	유동성지원
덴마크	3.5	15.7
스웨덴	4.2	5.3
핀란드	4.3	7.5
한국	4.5	10.1
노르웨이	7.4	4.5
스페인	7.6	14.4
스위스	7.8	6.2
벨기에	8.2	11.9
프랑스	9.6	15.2
체코	9.6	15.5
네덜란드	10.3	8.1
이탈리아	10.9	35.3
독일	13.64	27.8
캐나다	15.9	4.0
영국	16.2	16.7
일본	16.5	28.3
호주	18.4	1.8
싱가포르	18.4	4.7
선진국평균	17.31	11.4
뉴질랜드	19.3	1.6
미국	25.4	2.4



9

한국 코로나대응 상대적 긴축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 집중시키고 높은 초과사망률 초래

- 이 긴축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즉 요양 시설 거주자, 가난한 노인,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장애인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사망자가 집중됨.
- 또한 사회적 저항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의 조기 종단을 초래하여 다른 제로코로나 나라들과 달리 초과사망자가 2021년 초 5%를 넘어 상당히 높음
- 제로코로나 국가중 가장 높고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과 방역 엄격히 하지 않은 유럽 중위 수준 국가들과 유사
-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 사망률의 2.3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음



9

한국과 일본 :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단적으로 자영업피해 대응

- 한국의 자영업 보상

- 영업 제한은 매우 엄격
- 피해 보상은 매우 제한적

- 일본의 자영업 보상

- 법적, 행정적 영업 제한조치가 없음 : 경제적 인센티브
- 임대료 : 소득 30~50% 하락의 경우 2/3 보상(상한 50만엔)*6개월
- 소득 보상 : 월 10만엔* 12
- 긴급사태를 실시하는 구역 등 1일 4만엔~6만엔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給付額	
法人に最大600万円、個人事業者に最大300万円を一括支給。	
算定方法	
申請時の直近1ヵ月における支払賃料(月額)に基づき算定した給付額(月額)の6倍	
支払賃料(月額)	給付額(月額)
75万円以下	支払賃料×2/3
75万円超	50万円+[支払賃料の75万円の超過分×1/3] ※ただし、100万円(月額)が上限
37.5万円以下	支払賃料×2/3
37.5万円超	25万円+[支払賃料の37.5万円の超過分×1/3] ※ただし、50万円(月額)が上限

- ①緊急事態を実施すべき区域等
20時までの営業時間短縮要請(酒類提供時間は19時まで)を実施する場合に、
1日6万円(月額換算最大180万円)
- ②①以外の区域
1日4万円(月額換算最大120万円)

10

윤석열 정부의 보건 의료 긴축 정책

- 윤석열 대통령 말씀

- "(문재인 정부 기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
-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침

- 건강보험 재정위기? (12.13 대통령실) -> 문재인케어 삭감

- 건보재정위기로: 문재인 케어 5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2040년 누정재정적자 678조?
- 건보 남용론: '외래진료 상위 10명 외래진료회수 1,000~2,000회', '초음파 MRI 1,800억원에서 3년 새 1조 8천억원으로 증가'
- 보험료인상 위기로: '연평균 보험료 인상을 전임정부의 0.99%에서 2.7%를 넘어섬'

- 공공의료 재정 삭감: 공공의료원(지방정부 등), 국립의료원 등,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구조조정 예고

11

윤석열 정부의 건보재정 위기론

- 건보남용론
 - “외래 상위 이용자 10위 1000~2000회” :
 - 집계 후 십 몇 년째 상위 이용자는 1000회 이상 이용
 - 유시민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보호 보장성 삭감 당시 활용
 - 한국판 “복지 Queen” 데마고그
 - 초음파, MRI 3년 새 3배?: 남용인지 미충족 필요(unmet need) 충족인지 구분 안하고 근거 없는 억측
- 건보재정 악화론
 - 2040년 누적적자론: 보험료 인상 없을 때라는 가정 비현실적 추계
 - 문재인 케어 건보재정 위험?: 전혀 근거없음. 건보누적 흑자 지속
- 전임정부 보험료 폭탄론: 노무현 정부 5.6% 이명박 정부 4.6%, 윤석열 정부 1.7% -> 근거없음
- 공공의료 재정삭감:
 -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훈 전혀 없음. 공공병원 10%가 70% 환자 진료, 반면 손실보상은 민간병원이 70% 이상
 - 공공수가와 같은 민간의료기관 재정 퍼주기는 지속하고 공공병원은 구조조정 (긴축재정속 기업과 부자감세는 지속)

12

경제위기시 바람직한 건강재정정책(유럽경험으로부터)

- 긍정적 건강 영향 혹은 악영향을 줄인 조치들
 - 건강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경기대응 공공지출 촉진 정책.
 - 원래 건강에 대한 공공 지출의 적절한 수준.
 - 빈틈 없는 포괄적 건강보험 유지.
 - 상대적으로 낮거나 무상인 본인부담금 상태 유지
 - 다양한 서비스 및 개입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비교 정보 활용
 -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보건 부문의 수익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의지
- 영국의 두번째 긴축에 대한 경고
 - Health와 care를 분리해선 안된다 (보건부문 예산만 유지, 돌봄 예산 삭감으로 장기적 피해 발생)
 - 장기적 시야를 놓쳐서는 안된다 (학생 장학금 폐지로 간호사 고용힘듦, CT, 건물 예산 삭감으로 현재 문제)
 - 시작지점을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2008년 긴축 시작지점은 지금보다 좋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

13

한국의 현실에서 보건의료 긴축정책은 재앙

- 한국은 간접적 경비 삭감이 아닌 1)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직접 높이려는 시도(건강보험 적용대상 축소) 2) 병원 의료인력 구조조정, 3) 공공병원 예산 삭감 등으로 보건의료 이용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 매우 후진적 직접적 긴축정책임
- 97년 IMF 외환 경제위기시기의 긴축정책의 건강피해, 사회적 피해가 너무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훈 망각. 즉 한국의 자살률은 97~98년 위기뒤 급격히 상승, 경제회복후에도 곧바로 줄어들지 않았고 일시 회복후 2000년 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대 들어와서야 하락함. 노인 빈곤률, 출생률, 노숙자 문제등 97~98년 경제위기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사회적 지표가 많음. 97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된 긴축은 한국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사회구조 자체를 변화시킴
- 더욱이 한국은 긴축정책이 없어도 OECD 국가중 높은 의료이용시 본인부담비용 가장 높은 나라, 공공재정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의료이용 상하위 격차 가장 큰 나라, 재난적 의료부담 가구 가장 비중 높은 나라임.
- 한국에서 긴축재정은 간접적 건강 영향(실업, 불안정 노동증가, 주거불안정, 먹거리 불안정, 요양 노인 복지 약화 등) 및 직접적 건강영향(본인부담 인상 등에 의한 의료이용 불가능 증가 등)을 재앙적으로 악화시킬 것임
- 한국 사회의 97~98 경제위기와 긴축정책, 다른 나라들의 긴축정책의 실패 경험에도 다시 추구되는 긴축정책과 보건복지분야의 긴축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고 한국사회를 수십년간 후퇴시킬 수 있음

14

2023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다중위기의 세계

- 코로나 위기 :
 - 전세계적으로 650만~수천만 명의 사망자, 아직도 지속
- 세계적 경제위기
 - 2008년 이후 대불황,
 - 팬데믹, 전쟁으로 악화
- 기후위기
 - IPCC 2011.9 보고서 : '돌이킬 수 없는 시점' 2040년으로 10년 앞당김
- 전쟁, 핵 위기?
 - 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와 NATO 대립 : 장기적 소모전 양상, '전술핵'
 - 미-중 군사적 갈등 심화: 대만 문제
- 긴축정책 중단으로만 해결될 상황이 아님
- 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일. 보건 및 복지 운동, 사회운동의 역할



15

토론1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사회정책, “약자 발굴 복지”가 최선인가?

양난주_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자는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애써 파악해본다면 사회정책의 키워드는 긴축과 민영화이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등장한 ‘약자복지의 확충’으로 선별적 복지 강화 방향이 보인다고 정리하고 있음. 시장주의 보수정부에서 사회보장은 시장의 결과에 대한 잔여적인 개입의 성격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사회보장에 대한 비전 제시의 부재, 긴축과 민영화, 그리고 약자복지의 강조는 소극적 사회정책,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철학적 일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이 과연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당대의 “약자”를 발견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현재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음.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 복지, 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사업이라 규정하였고, 2023년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은 27개 법률을 관련 사업 범위로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대상을 표적화하여 관련 시설을 확대하는 방식의 사회복지의 문법이었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대상의 특성에 따라 각종 시설과 센터, 지원센터로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 정부가 제도를 관장하고 재정을 보조하지만 실제 시설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겨온 특성을 갖고 있음. 이 복잡한 시설, 기관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다른 수급자격과 절차가 제각기 작동되고 다양한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구조임. 사업별로 민간에 위탁된 시설과 센터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서비스와 사업 연계가 없기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분절성과 파편성을 피할 수가 없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드러내는 키워드임. 오랫동안 가족이 책임져온 돌봄은 의료서비스에서의 가족간병, 초등학교 방과후 사교육, 요양병원의 간병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와 교육서비스의 불완전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토대에 가족책임주의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음.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생애주기와 상황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조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 단계에서 대상별로 표적화된 프로그램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돌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병원, 학교, 이용시설들, 재가서비스를 망라하여)과 인프라의 적정성, 다양한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성, 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공급과 서비스 유형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면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환의 경로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공공성 강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돌봄) 보장과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임.

1인-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사회,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직업을 구하고 경력개발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받는 사회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전담하던 돌봄을 사회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개인과 가족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게 됨. 이제 다양한 가족관계와 유연한 가구구성을 뒷받침하고 개인들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회적 돌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기존의 대상별, 유형별로 쪼개진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확대하면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적 창구가 서비스 신청과 욕구 사정의 1차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 돌봄보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은 공적 행정·규제체계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체계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이며 이를 따라 지역사회 관계망,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함. 무엇보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공적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기존 민간사회복지주체들의 혁신이 필요한 작업임. 제도적 질서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이러한 혁신은 시장경쟁이나 민간투자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법제도 개선과 협치, 제도혁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복지⁶”를 주장함.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고 긴급복지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올리고, 재난적 의료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를 인상하는 일은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일이고, 기존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봄. 그러나 다양한 취약계층의 “약자성”을 밝혀 맞춤형복지를 하는 것으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가 약 21배, 자산격차가 약 13배인 소득불평등⁷, 26년째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⁸, OECD 회원국 1위인 노인빈곤율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끊임없이 약자를 발굴하여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보다 다양한 약자가 양산되는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큰 틀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⁶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97>

⁷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427.html

⁸ https://www.ytn.co.kr/_ln/0103_202301141656210866

- 김진석 교수의 발표는 경제, 사회 및 사회정책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담았음. 이를 모두 토론하기는 어려움. 본 토론은 '긴축'에 초점을 두고 통상 긴축의 물적토대로 알려져 있는 감세를 중심으로 간단히 논하고자 함.
- 얼마전 여야는 법인소득세율 구간별 인하 등 자본 및 법인소득세 인하에 전격 합의함. 감세는 통상 경기침체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단행. 이를 통해 투자나 고용이 늘고 세입증가가 유도되는 일종의 선순환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감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 다만 현재까지 관련 학계의 합의는 감세가 기업투자과 고용을 촉진하더라도 매우 미세한 영향만 준다는 것임.
- 감세는 대체로 정부의 재정압박을 반영하므로 지출, 그 중에서도 복지재정에 대한 축소를 유인. 이것이 우리가 긴축과 축소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방식이며 출범전부터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현 정부가 향후 긴축재정전략과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예측된 바임.
- 다만 긴축이 반드시 축소의 형태 혹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님. 예를 들어 복지지출은 보수적 정부에서도(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증가해왔음. 시장주의의 전면화를 천명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마찬가지임. 긴축이 양적인 복지축소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연금, 보건의료 등 비중이 큰 제도에 대한 세심한 부가적 설명을 필요로 함. 즉 양적인 측면이나 몇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느냐 여부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님. 연금과 같이 제도성숙과 고령화에 따라 자연순증할 제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임(유럽은 전체 복지지출 중 6-70%가 이들 몇개 제도에 집중).
- 지금까지 우리는 복지지출 자체의 감소나 사회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시장화 통한 국가책임의 약화,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의 축소, 일시적이고 잔여적인 급여의 확대, 프로그램 확대의 미이행 등의 프로그램적 축소에 관심과 비판을 집중한 경향이 있었음.
- 문제는 이러한 가시적 형태의 축소보다는 향후 혹은 즉각적으로 복지가 축소될 개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환경을 변화시키는 체계적 축소를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감세는 미래세입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거나 지방정부 간

경쟁유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적대적 여론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들(부정수급, 복지중복),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건전재정) 강조 등이 대표적임.

- 양적축소나 프로그램적 축소와는 달리 체계적 축소는 반드시 긴축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히 비가시적인 형태로 전개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는 다분히 긴축이 재정사안이라기보다 정치적 영역이라는 점을 함의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긴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주로 제도 및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음.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다양한 수당제도의 수립 및 확대를 달성함.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 제도와 지출은 끊임없이 증가했지만 긴축의 영향은 장기적이며 다방면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임.

토론3

긴축은 공공성과 공존할 수 없다

이재훈_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1. 윤석열 정부 : 시장중심 민간주도 성장

- 공정 혁신경제 강조 : 국가의 역할은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시장 환경 조성 관리에 국한 → 전형적인 이윤주도 성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회귀.
 - 윤대통령, “모든 부처가 산업부”(22.10.27).
- ‘작은 정부’ 추구. 시장중심 재편을 위한 ‘강한 정부’ 추구.
 -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긴축.
 - 재정 보수주의 강화 : 재정건전성 강조 →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대규모 대기업 부자 감세, 공공부문 지출효율화와 구조조정, 긴축 재정 등.
 - 자본친화적 노동계약(이미 노동탄압 수준으로). 민간투자,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인센티브, 서비스산업 및 디지털·AI등 전략산업 활성화 등.
- 이미 실패한 낡은 전략으로의 퇴행.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등 잘못된 전철 답습.
 - OECD나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조차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하고 오히려 지속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실패한 것으로 인정한 낡은 전략으로의 퇴행.
 -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불황’ 그 자체보다 긴축이 빈곤과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체득.

2. 사회정책 : 성장과 시장에 종속, 재정보수주의에 포획

-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차이.
 - 문재인 정부는 (실제 이행평가와 별도로) 통합적인 사회정책(복지, 교육, 주택, 일자리)을 구축해 경제정책과 대등하고 독자적 위상을 강조하면서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
 - 반면, 윤석열 정부는 성장 주도 정책에 종속. 국가의 재정책임 축소 및 시장화 정책 가속화.
-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 사회보험에 대한 보장성 축소 및 보험수리적 수지균형의 관점으로 재정안정 강조.
 -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 사회보험 보장성 약화 + 정부 부담 축소 +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위험자산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동원) = 사적보험 활성화.
 -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지출 비중 높은 의료와 연금 등이 주요 타겟.
 -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비는 12.5%('20). 이중 63.9%인 8.0%가 사회보험(5.7%가 건보, 연금, 요양). 2060년 장기전망에서는 공공사회복지 GDP 27.6% 중 82.6%가 사회보험 재정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 재정균형 강조하면서(재정고갈, 보험료 폭탄 등), 공적보험에 대한 정치적 공세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국고 일몰, 기금화 논란 등
 - 의료, 요양 등 불법·부당청구, 비용유발적, 낭비적 지출구조는 방관.
 - 공적보험의 기본 목표와 원리를 부정하면*, 축소일변도의 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 → 결국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하는 간접적 시장화로 귀결.

* 순혜택, 부과방식 비용을, 균형보험료를 등 문제없이 사용되는 개념의 문제들.

<참고> 사회보험 재정안정 문제에 대한 비판⁹

장기재정전망? 기금소진이 제도파산? 제도 축소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
사회보험의 재정위기? 사적 부담 아닌 사회적 부담 증가 ≙ 사회적 보장 증가
기금고갈론이 오히려 제도 지속성 위협 : 제도 신뢰 > 재정 안정
적립금이 많으면 재정안정인가 : 적립금 규모 ≠ 재정 안정
보험수리적 접근의 한계 : 다양한 수입확대 전략 > 보험료 인상

⁹ 자세한 내용은 이재훈.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전망과 대응 : 재정건전성을 넘어 사회보장강화로(2022. 5. 3) 토론회 발제문

사회보험과 노동시장의 조응 과제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재정에 대한 사회적 부담 :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보험 개혁? 제도의 본래 목표 상기할 필요
 투자전문가 중심의 운용? 가입자 중심의 민주적 지배구조 중요

-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고도화.

- 민간자본의 투자와 참여 활성화 : 사회적경제 단위 이외에도, 대규모 자본의 민간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특히 민간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AI·로봇 산업과 연동.
- 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공급형에게 민간 지원형으로 역할 전환.
 - 울산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기능 축소 및 통폐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210억 원→68억 원, 서울시 종합재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폐지 등).
-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축소 등.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공공기관) 민영화, 시장화와 구조조정.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29)에 따라, 370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인력감축, 예산감축, 자산매각 등 계획 추진.
-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고유 목적달성이나 공공성, 안전 중심으로 평가 진단하기보다 민영화나 비용절감, 조직축소 등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공성식, 2022)¹⁰.

<235개 기관에서 6,949명 정원에 해당되는 기능조정 계획 제출>

- 공공이 수행하는 안전 관리, 교육, 검사, 진단, 인증 등 폐지·축소 또는 민간이양.
 - 장비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보안 업무 외주화, 예산감축.
 - 코로나19 등 전염병 전담업무 축소 /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 및 사업비 축소 / 국립대 병원 등 인력확충 요구 거부(기재부의 승인율 5개 국립대병원 평균 28.5%).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부동산원 등 데이터 민간 개방.

¹⁰ 자세한 내용은 공성식, 작은 정부는 어떻게 안전을 위협하는가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안전위험(2022. 11.24) 토론회 발제문 참조

3.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 긴축과 민영화·시장화는 노골적이면서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
 - 민영화 피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재)공영화 흐름 존재. 그러나 국가마다 제도적 맥락,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조건, 사회 역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 존재.
 - 자본의 위기 극복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 동원, 다양하고 변형된 축적방식 채택.
 - 재정보수주의 이데올로기는 각 분야·제도별로 독립적·전문적 언어로 둔갑하거나, 정반대로 대중적으로 통용되기 쉬운 논리적 구조와 근거를 만들면서 확산.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인가.
 - 한국은 2017년 소위 핀셋 증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세조치(이상민 2022).
 - 코로나시기, 전체 재정지출규모가 OECD 국가보다 낮으며 특히 보건분야는 OECD36개국 가운데 31위, 평균의 1/3 수준. 반면 지분투자, 기업대출. 자산매입이나 부채 인수 등 유동성 확보 등 위한 금융지원은 OECD 평균 8.2보다 높은 10.2%(세계 110개국 중 12위, OECD 중 9위).
 - OECD의 공공부채 전망(2020)에서도 추가확산이 이뤄지더라도 GDP대비 0.8% 수준으로 OECD 평균(8.02%)의 1/10수준으로 전망할 정도.
- 긴축과 재정보수주의는 복합 경제위기뿐 아니라, 기후위기, 산업구조변동, 인구학적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
 - 중기 시각에서, 공동의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집합적 자원 조성 : 적극적인 누진조세와 새롭고 다양한 자원, 공공서비스 확충 전략 마련 필요.
- 대응정책은 대안정치를 형성하고 있는가.
 - 여소야대 정치구도에서 예산안, 감세안 통과.
 - 상병수당 3년 시간끌기 시범사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시장화 정책 등.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나온 이야기가 라포르시안 기사에 인용되어 있어 재인용하자면 “불황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긴축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 책에서 재정긴축은 공중보건 사업 예산을 민감하게 삭감하게 됨.

이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보호할 사람만 보호하는 선별복지도 동시에 나타남. 동시에 보건산업부라는 보건의료 분야 산업화 논리도 동시에 단골로 출현하는 것 같음. 이에 따라 최근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를 통해 보장성 축소 논리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때 활발하게 논의되던 공공병원 확충도 된서리를 맞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공중보건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일자리 및 복지, 주거, 식품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것은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계층에 건강수준을 낮추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한국의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 혹은 재정부처는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들어올 세수는 감소하고 지출요인이 커지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함.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재정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초래될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살펴봐야 함. 고령화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이 방치되어 생산력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양극화의 방치로 인한 사회통합력 감소로 갈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냉정히 내다봐야 함.

건강한 노년을 늘려 생산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정세수 확대와 재정지출 감소를 결과할 수 있고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억제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이 사회통합을 확대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의료급여 예산의 빠른 증가에서 보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의료비 증가도 미리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함.

문제는 돌봄 및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는 것임. 사회복지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사회 보편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여 가계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 및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향후 한국사회 사회발전 방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당면하게는 건강보험보장성 축소에 대한 대응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특히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권인 상황을 비추어보고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거의 17조 원 수준인 것을 보아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및 한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신종감염병 등 재난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음.

[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발행일_2023. 01. 18.

공동주최_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